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 제2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8.5.10 ~ 2019.5.9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8. 5. 10 ~ 2019. 5. 9



## 발간사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늘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 책은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 9일까지의 대통령 연설과 주요 회의 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심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저항에 맞닥뜨려도 결코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국민께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 책은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문재인정부 2년차의 기록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도전의 역사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 7번째로 경제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 평화에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곧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미래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대통령의 연설에는 모든 국민이 평화 속에서 함께 잘사는 길로 가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때론 길동무로, 때론 냉철한 감시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을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삼겠습니다. 늘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걸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차례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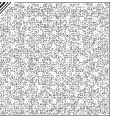
2018. 5. 14	수석·보좌관회의 …… 8	2018. 8. 27	수석·보좌관회의 … 45
2018. 5. 28	수석·보좌관회의 … 11	2018. 8. 28	제37회 국무회의 … 47
2018. 5. 29	제24회 국무회의 … 13	2018. 9. 3	수석·보좌관회의 … 50
2018. 6. 11	수석·보좌관회의 … 15	2018. 9. 11	제39회 국무회의 … 53
2018. 6. 12	제26회 국무회의 … 17	2018. 9. 17	수석·보좌관회의 … 56
2018. 6. 18	수석·보좌관회의 … 18	2018. 10. 8	제43회 국무회의 … 58
2018. 7. 2	수석·보좌관회의 … 21	2018. 10. 10	수석·보좌관회의 … 60
2018. 7. 3	제29회 국무회의 … 24	2018. 10. 23	제45회 국무회의 … 63
2018. 7. 16	수석·보좌관회의 … 26	2018. 10. 29	수석·보좌관회의 … 65
2018. 7. 23	수석·보좌관회의 … 29	2018. 11. 20	제49회 국무회의 … 67
2018. 7. 24	제32회 국무회의 … 33	2018. 12. 10	수석·보좌관회의 … 70
2018. 8. 6	수석·보좌관회의 … 36	2018. 12. 11	제52회 국무회의 … 73
2018. 8. 13	수석·보좌관회의 … 38	2018. 12. 17	수석·보좌관회의 … 75
2018. 8. 14	제35회 국무회의 … 40	2018. 12. 31	수석·보좌관회의 … 78
2018. 8. 20	수석·보좌관회의 … 42		

### 2019년

2019. 1. 8	제1회 국무회의 …… 82	2019. 2. 26	제8회 국무회의 …… 104
2019. 1. 14	수석·보좌관회의 … 85	2019. 3. 19	제11회 국무회의 … 107
2019. 1. 21	수석·보좌관회의 … 87	2019. 3. 25	수석·보좌관회의 … 110
2019. 1. 22	제3회 국무회의 …… 90	2019. 4. 1	수석·보좌관회의 … 112
2019. 1. 28	수석·보좌관회의 … 93	2019. 4. 9	제14회 국무회의 … 114
2019. 2. 11	수석·보좌관회의 … 95	2019. 4. 15	수석·보좌관회의 … 119
2019. 2. 12	제6회 국무회의 …… 97	2019. 4. 29	수석·보좌관회의 … 122
2019. 2. 18	수석·보좌관회의 … 100	2019. 4. 30	제17회 국무회의 … 125
2019. 2. 25	수석·보좌관회의 … 102		



2018



## 수석·보좌관회의

2018. 5. 14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써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표준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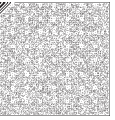
국민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께 보여 주기 바랍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해서 때로는 정부 입장과 배치

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국가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으로 내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급기야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루어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사회 지도층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5. 28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평양회담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두기 바랍니다.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



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이 시급합니다.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빈곤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 제24회 국무회의

2018. 5. 29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큰 변화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단축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인력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 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 9,000억 원 규모 추경정예안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습니다.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추경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거제·창원·통영·고성·영암·목포·울산 동구 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하여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 사항을 총괄 점검해 주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6. 11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개최됩니다. 이제 두 정상에게 세계적인 만남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로 회담 성공을 위한 성의와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과 기대 속에서 국민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북·미 간 진정성 있는 노력과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남북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남북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의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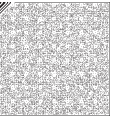
## 제26회 국무회의

2018. 6. 12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에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내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처음 치르는 전국선거인 만큼 투·개표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시대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듭니다.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습니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공직선거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아서 최종투표율이 기대가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6. 18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는 회의장에 참석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비서실 직원들께 특별히 당부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우리 국정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갇아야 할 외상값이 많더라도 우선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압도적 승리,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선거 결과에 깊은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구조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 나가는 정치도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표를 이룬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꾸어 왔던 일이고, 3당 합당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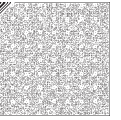
저는 지역주의, 정치구조, 색깔론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우

리 정치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높은 투표 참여와 성숙한 주권자 의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주신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잘한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덕분이다”, “대통령 개인기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뭔가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 함께한 청와대 비서실과 문재인정부의 내각이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도 선거 결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깨가 매우 무거워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 같은 채찍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에 선거의 승리가 그다음 선거에서 아주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왔던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건 선거 결과를 기뻐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움과 두려운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속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능해야 합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기본은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정을 이끄는 곳입니다. 국정을 이끄는 중추이자 두뇌라고 본다면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합니다. 모두 1년의 경험을 가졌기에 지금부터 국민에게 유능함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늘 강조하다시피 도덕성입니다. 여소야대 가운데 우리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 힘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더 높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그 중심에 부정부패 청산이 있는데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하면 국민이 바라는 중요한 국정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공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태도는 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질인가 하면 국민을 모시는 존재가 정치인들이고 공직자라면 본질이 태도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직자라면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청와대는 국민이 보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태도 면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론은 선거 결과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하고, 그다음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 드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7. 2

다들 안녕하십니까?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



기적으로 줄이고 줄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융통성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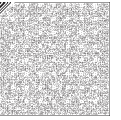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지난주에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제 사정상 연기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우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 후 이뤄지기를 국민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하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광역단체장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제29회 국무회의

2018. 7. 3

지금 제7호 태풍 프라삿룬(Prapiroon)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 진행경로가 당초 우리 내륙에서 대한해협 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풍 영향권인 제주, 부산 등 남해안 지역은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범정부적으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도 정부도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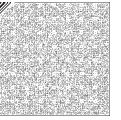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정부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지역에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에게 일일이 방문해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과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 심의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벌써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광화문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운동'의 외침까지 국민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모아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도 많은데 또다시 보완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부처 장관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만의 업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 업무로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보완대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용 제청받았습니다. 그 대로 임용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네 명으로 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런 성격의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위원이 과반수 넘게 구성됐습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양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체감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7. 16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 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을 받거나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조정 및 가맹점 보호 등 조속히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외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ASEAN)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접목시켜 사람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 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  
구대국이 되고, 미국·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은 이  
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  
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입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올해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  
진하기 위한 체계를 세우고, 정상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은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7. 23

오늘 마린은 헬기 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영결식에 우리가 함  
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  
리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고로 부상을 입  
은 분도 지금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대한 수술을 받는  
다고 들었는데, 부디 수술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에 이어서 또 하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하지는 않았지  
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한국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  
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  
격을 높이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에 대해서도 깊이 애  
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  
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습니다.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





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혜택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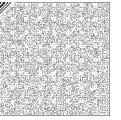
둘째, 과감한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 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왔던 우리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가 뿌리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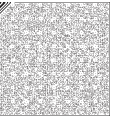
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됩니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 제32회 국무회의

2018. 7. 24

무더위 때문에 국민이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고는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노동자와 농어업인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열차선로 문제 등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 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 드리기 바랍니다.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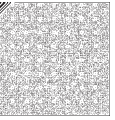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휴양지 안전시설과 사고 취약지역,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피서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제도나 절차 등을 정비해 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듬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여부를 부모님께 알려 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령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안전·아동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8. 6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염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국민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안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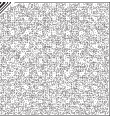
경제는 국민의 삶입니다. 경제 활력은 국민 삶에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계속 머뭇거리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온종일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에 연결시키는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8. 13

어제 오후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2명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 오길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원 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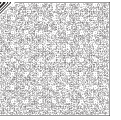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도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

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2,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행객들은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국민의 국내소비 증가율보다 해외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면서 해외소비의 일부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계부처는 입국장 혼잡이나 밀수 문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제35회 국무회의

2018. 8. 14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 때문에 국민 모두 고생하시지만 가장 가슴이 타들어 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라 가는 작물, 폐사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지키느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 공급, 기술지도 등 농어업 분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어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극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면서 배추, 무, 과일, 축산류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외식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 출하 등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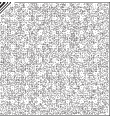
특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현

행 제도를 적극 해석해서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보상 근거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됩니다.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의 독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8. 20

역대 가장 길고 강렬했던 폭염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께서 더위로 고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생긴 여러 분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와 같은 폭염이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있는 태풍 솔릭(SOULIK)에 대해서도 폭우나 강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립니다. 70년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살던 부모와 딸·아들, 자매·형제 등 170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상봉 대상자들의 연세가 101세부터 70세까지 고령인 만큼 응급진료체계 등 상봉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타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 6,000명이 넘습니다.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

자 “이제 끝났다”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입니다.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여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도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 구조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우리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팀워크를 이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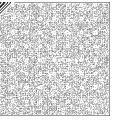
2018. 8. 27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SOULIK)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상륙 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비를 잘하고, 특히 국민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피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등지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폭우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인력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태풍의 강도에 따라 휴교나 휴업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휴교나 휴업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함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허점이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기 바랍니다. 외국에서도 연금제도 개혁은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7년에나 가처분 통과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랍니다.

## 제37회 국무회의

2018. 8. 28

올여름 아주 긴 폭염에 이어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SOULIK)에 대응하느라고 모두들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치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태풍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태풍 피해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까지 겹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해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만큼 피해복구에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서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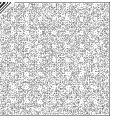
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의 경제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의 대폭 인상, 기초생활 보장의 강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생활 SOC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

의를 이루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대책, 사회서비스 강화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9. 3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봅니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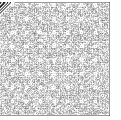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는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기 보다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

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 봅니다.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기에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500여만 명의 어르신께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 원에서 우선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또 6세 미만 아동 238만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행정기관은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기 바랍니다.

## 제39회 국무회의

2018.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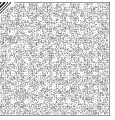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관계 종식에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 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로 여건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건어내야 합니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대화의 교착상태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는 당리당락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추석 연휴 전날 출국, 연휴 다음 날 돌아올 예정이어서 추석을 국민과 함께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는 모처럼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폭우로 채소, 과일 등 성수품의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이 염려됩니다. 제수용품의 수급과 추석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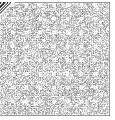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안전 분야와 교통대책도 꼼꼼히 점검하고 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게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자금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임금체불 단속과 채당금(替當金) 신속지원으로 노동자들이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들은 명절 때 더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이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더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 결식아동, 시설 수용자,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빠짐없이 닿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는 국민의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일 귀경·귀성객 비중이 늘고,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명절 연휴를 혼자 보내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휴를 이용해 가족여행을 가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고궁과 공원 등 전국 문화체험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지역축제와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체험프로그램, 국내 관광지와 명소, 지역의 맛집 등을 잘 홍보하여 국내 여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국민께서도 해외로 향하던 발길을 국내로 돌려 많이 이용하고 즐겨 주신다면 고향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르스(MERS) 환자가 발생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관계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관계부처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9. 17

내일 저는 평양에 갑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국민께 드립니다. 저로서는 4·27판문점회담부터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입니다. 9월 14일에는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개설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 간에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27판문점선언을 비롯해 그간의 남북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흥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각계 인사도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 불신을 털어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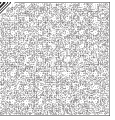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평화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 정세에 휘둘리

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저는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 관계 청산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에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고 오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3회 국무회의

2018. 10. 8

어제 평양에 다녀온 미국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 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제혁신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 합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습니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을 촉진하여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신 관련 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10. 10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입니다.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이나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은 점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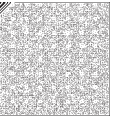
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9명, 부상자 수는 3만 3,364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한 해의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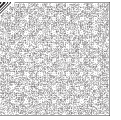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제45회 국무회의

2018. 10. 23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유럽순방은 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 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ASEM 정상회의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하여 우리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의·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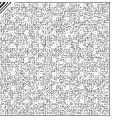
## 수석·보좌관회의

2018. 10. 29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고, 사립유치원 등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히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제49회 국무회의

2018. 11. 20

아세안(ASEAN)과 APEC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년 만의 발걸음이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상이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도 큰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포용적 성장과 격차 해소, 사람중심 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아세안과 인도, 호주 등은 환영과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아세안과 인도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이들 국가와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교역 규모와 수출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의 시장입니다. 작년 한 해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25%, 수출액은 28%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한류문화가 가장 먼저 확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한 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인구 1억 명에 경제성장률은 7%대입니다. 작년 한 해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42%, 수출액은 46%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시장입니다. 인구 2억 6,000만 명의 인도네시아도 평균연령이 29세로 젊고 경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몇 년 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되면서 G3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 인도와의 교역액과 수출액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이 상호간의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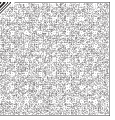
경제·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사람 교류도 더해 마음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다층적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내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개최되는 첫 국제 정상회의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므로 범정부 추진단을 미리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으로 일구어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제조업

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자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소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12. 10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로 적자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됩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및 스마트공장 확대·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을 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민생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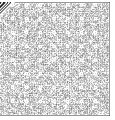
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경기상황과 미래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큼니다.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개발, 플랫폼 경제기반 투자, 8대 핵심 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민생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어온 법안들도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협치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경제 3법, 「의료기기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께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강릉선 KTX는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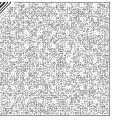
## 제52회 국무회의

2018. 12. 11

반갑습니다. 취임 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특별히 치하합니다.

정보화, 지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만 화상회의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회의를 위해서 또는 국회 출석을 위해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집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 오셨는데 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큼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었으면 합니다.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 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민께서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경제인,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경제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전북, 11월에는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화 등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이곳 세종시에서부터 지역 활력을 살리는 결의와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12. 17

우리 정부는 포용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삼고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아동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선택 진료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2세 아이의 경우 총 의료비는 4,395만 원, 당초 환자부담금은 1,243만 원이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397만 원만 내게 되어서 부담이 70%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치과와 한방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광·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환자를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낮추었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은 올해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정책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유치원 501학급,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47곳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입니다.

온종일돌봄 정책도 확대합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 명에서 내년 37만 명, 2022년에는 53만 명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한 부모와 비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 원에서 내년 2,23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 5,000명에서 내년 15만 7,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한부모·비혼모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 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일 것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24세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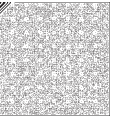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산재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께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8. 12. 31

한 해를 마감하면서 먼저 국민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은 남북 관계를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남북과 북미 사이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뢰 제거, GP(감시초소) 철수, JSA(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등 작년 이맘때만 해도 꿈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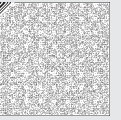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함께 벤처투자 금액 사상 최고치 기록, 전

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 세계 6위 수출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넘는 경제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께서 흘린 땀방울로 이룬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해에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합니다. 사람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목표가 경제 현장과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한다는 열정에, 외교 및 남북 관계 업무로 밤낮없이 뛰느라 수고한 청와대 직원들을 치하합니다. 서로서로에게 '고생했다, 더 잘 하자'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를 쳐줍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국민께서는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어떤 부처나 기관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 보듯, 또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애(自



重自愛)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이 손에 익으면 요령이 생기고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관성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의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직장 내 갑질 문제, 적폐 청산 등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선의로 권력기관의 운용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개혁이 영속성을 가지고 정착될 수 있습니다. 개혁은 더 많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이룬 개혁은 당연시되고 더 많은 개혁의 요구가 불만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요구에 응답해 또박또박 할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께 무한대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새로운 자세로 다짐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모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19



## 제1회 국무회의

2019. 1. 8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여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께서 경제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습니다.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자의 구겨

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마다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관까지 한 팀이 되어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입니다. 정부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편익입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 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되었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유통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가짜 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지원 대책도 강구해 기업이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 가운데 1월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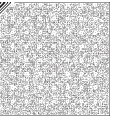
## 수석·보좌관회의

2019. 1. 14

새해 첫 수보회의이면서 이른바 2기 청와대 첫 수보회의입니다. 1기 청와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의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유능의 척도 속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됩니다.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와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청와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범 때 우리가 가졌던 초심,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해 청와대가 모범이 돼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 긴장감과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2기 청와대에는 그 초심을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외형의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때때로 단편들이 드러났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장하에 모든 피해자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또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학업보다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운동을 중단하면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출전, 진학, 취업 등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코치나 감독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 체계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 주기 바랍니다. 체육계도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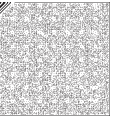
2019. 1. 21

지난 주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고위급 회담,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실무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말께 열리게 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국민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습니다. 끝까지 잘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큼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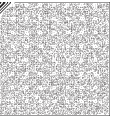
불과 1년 전과 후의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청장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구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북구청장은 그 원인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재정자주도 요소로 차등적용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적용됩니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또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청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기초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 보니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는데 기초연금 부담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에 비해 오히려 기초연금 부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북구청장은 부산 북구청처럼 이 사회복지비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고, 오늘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함께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제3회 국무회의

2019. 1. 22

지난주에는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의 고통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흑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께서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입니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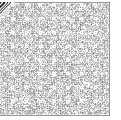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합니다.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도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립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어 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의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정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9. 1. 28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산재 등 3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설 연휴 기간 교통 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60명, 2017년 43명, 2018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올해 설 연휴 이동인원은 매일 700만 명, 특별 교통 대책 기간 7일 동안 5,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동인원이 많은데다 장시간 운전, 음주운전 등의 사고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사고위험 안내, 졸음운전 방지, 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 대책을 위해 드론과 헬기, 암행순찰차 운행 등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화재나 산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설보다 1,500억 원 많은 4,500억 원어치를 발행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입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난해 명절의 2배인 1,250억 원어치를 지자체들이 조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께서도 제수용품이나 설빔을 살 때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언 손을 녹여 가며 장사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골목의 가게를 찾아 값싸고 신선한 물품을 사면서 따뜻한 정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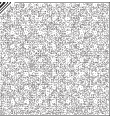
2019. 2. 11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 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례 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의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었습니다. 이번 2차 회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큰 원칙에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



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행운처럼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 나갈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평화가 옳은 길이고 우리의 의지가 그 길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남들이 꿈처럼 여겼던 구상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실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 두면서 한미 간의 공조를 긴밀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과 정당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같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을 생각하면서 국민께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제6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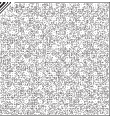
2019. 2. 12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준 두 부처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 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분야의 대표 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증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 허가를 내





주어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릅니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께서 잘 이해하

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면책제도에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 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 바랍니다.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이나 부작위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9. 2. 18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5월 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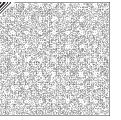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국민께서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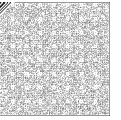
2019. 2. 25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할 것입니다. 북미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 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제8회 국무회의

2019. 2. 26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게 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위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조금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삼의사(三義士)와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가묘에서는 반드시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새겼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때 중국정부의 협조를 얻어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혹은 남·북·중이 함께 공동유해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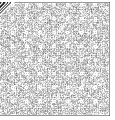
기도 합니다.

그간 채 알려지지 않았거나 가려졌던 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했고,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백범김구기념관과 함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공화국 역사를 전승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서훈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의결하는 정신도 같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열여섯 나이의 여학생으로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옥중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배우며 자주독립의 소중함과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유관순 열사의 의로운 기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주의회 상·하원은 3·1독립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서훈 추서가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선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내고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 세계 11위 경제강국이 됐습니다. 인구 5,000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일곱 번째 나라입니다. 국민의 땀으로 이룬 성취에 전 세계가 찬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에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냄으로써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온전히 국민의 힘으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우리에게 세계가 경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변방이 아닙니다. 이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 갈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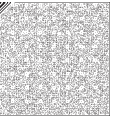
## 제11회 국무회의

2019. 3. 19

올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ASEAN)의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가발전에 따라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큼니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3개국도 모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브루나이와는 인프라 수주 기반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각각 강점을 가진 한류와 할랄의 결합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체결하여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2위국인 캄보디아는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아세안과 한·메콩 국가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심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





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됩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산업 활동 측면에서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심리지표도 나아졌습니다.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000명이 증가해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지수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는 건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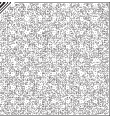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공장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 체감도

는 낮습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진 영향도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에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올 1, 2월 자동차산업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9.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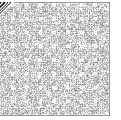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입니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되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9. 4. 1

다음 주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되었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과거 70년간 성공하지 못했던 길이므로 우여곡절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북·미 정상의 특별한 결단과 협의를 통해 시작되었고, 정상들 간 신뢰와 의지가 이 여정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그 여정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일이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한 지난 1년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야말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할 분명한 근거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입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질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60년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제14회 국무회의

2019. 4. 9

제가 그날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만,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하여 독립에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3·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임시정부는 해방과 독립을 넘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와 함께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을 선포하고 밖으로는 인류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이상이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겼습니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국호와 국기, 연호와 함께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주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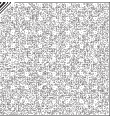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여섯 나라는 모두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경제력을 발전시켜 온 나라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으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는 과거 가격에 비해 질이 좋은 중저가 제품을 뜻했지만, 이제는 우수한 제품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뛰어난 한류문화를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 또한 놀랍습니다. 4·19혁명으로부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지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역이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입니다. 그 의미가 각별한 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





해야겠습니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께서 주인이고, 국민께서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새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 선대들의 뜻을 이어받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받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가 재난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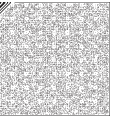
이번 산불 조기 진화는 모두가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터 산림청과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율방재단과 의용 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도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위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찾아 산불을 예방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만약 전력공급 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큰 원인이 된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난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쉼터 마련이나 급식 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재난 발생 후에 복구과정에서도 피해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복구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자금 지원을 비롯해 법씨 공급, 농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께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 재난 대응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계속해서 피해복구, 자원봉사, 구호물품과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피해주민들께 큰 위안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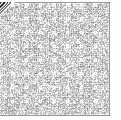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 주신다면 강원도민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9. 4. 15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Hanoi)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간 대화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대화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물론 미 행정부 관련 핵심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 간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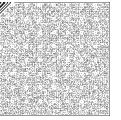
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

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2019. 4. 29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큼니다.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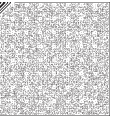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는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경제 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의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의 5G 상

용화 성공은 대한민국이 혁신을 선도하며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혁신금융 비전을 수립해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도 혁신의 옷을 입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벤처투자액, 신설법인 수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서 신생벤처로서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가 2017년 3개에서 최근에 벌써 8개로 증가했습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창업과 투자 열기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



고 새로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규제혁신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 허용 후 규제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시행 100일 만에 26건의 승인 사례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비해 속도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투자도 경제 활력의 큰 몫을 담당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허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가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정산분 10조 5,000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제17회 국무회의

2019. 4. 30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띕니다.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창업·벤처 활성화정책과 또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자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000명이 늘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5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치를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입니다.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근로장려금도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30대 미만의 단독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령 영세 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고용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2018. 5. 10 ~ 2019. 5. 9

발행	대통령비서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인쇄·제본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